

비판사회학 소식지

비판사회학회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권두언

신임회장 인사

서동진
(비판사회학회 회장/계원예술대)



안녕하십니까. 2023년 비판사회학회 신임회장을 맡게 된 서동진입니다. 어느 한 해가 학회라는 학술단체의 여정에 각별한 의미를 갖는 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억지이거나 과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다음 해가 비판사회학회의 방향에 특별한 전환을 요구하는 중차대한 해일 것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만에 귀환한 비판사회학회에서 감지하게 된 지난 기간의 혼돈과 표류를 생각하면 비판사회학회에 있어 올 해가 각별한 해일수도 있으리란 예감을 굳이 감출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감출 필요가 없는 비판사회학회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을 아마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비판사회학회는 1980년대 조금 더 보탠다면 90년대 초반 학번까지 이어지는 세대 출신의 사회학자들이 비판사회학회 내부에서 비판적 사회학의 이론적, 방법적 모델을 규범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의심을 줄고 받아왔습니다. 비판사회학회의 다수가 된 새로운 세대의 사회학자들 다수가 아마 이런 의심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들은 노동, 산업, 정치경제 등의 사회학 주제들은 비판사회학 내부에서 자연스레 우대받아야 할 주제로 취급되는 반면 이후 세대의 사회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온 이론적 대상과 연구의 성과들은 모종의 다원주의적인 가장 아래 비판사회학 내부에서 포용은 하지만, 고작해야 주변적인 위치를 배당할 뿐 비판사회학이 여전히 비판적인 질문과 대응을 하는 학회로서 구실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장식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불안해하거나 불신합니다.

(다음 면 계속)

그러나 이제 중견 혹은 원로 세대의 사회학자가 되어버린 저를 비롯한 이전 세대의 사회학자들의 항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사회학내에서 군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헤게모니란 실은 상상의 괴물일 뿐이며 이전 세대가 전력을 다해 연구한 주제와 관심사들은 학술 장 내에서 관습적으로 거론되는 기회를 빼면 동시대의 사회를 둘러싼 토론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과 회한이 또한 기존 세대 사회학자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 역시 억울하고 서운할 것입니다.

신임회장으로 제가 추천되었을 때, 고백하자면, 제가 직감한 것은 이러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중재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완고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로 비쳐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된 형태와 주체성에 대한 개방적인 분석과 연구를 수행한 진취적인 사회학자로 비쳐지고 있기에, 어쩌면 제가 모두로부터 호감과 지지를 끌어내며 비판사회학회의 제법 지속된 공경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짐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의 허술한 추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짐작에 기대어 비판사회학회의 회장으로서의 제 역할에 대하여 모색할 생각도 역시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학자답지 못한 생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비판사회학회 내부의 문제는 비판사회학회 회원들과 세대 간의 불화이기보다는 그간 우리가 관통했던 역사적인 사회 형태가 생산한 효과일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사회학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떠들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비판사회학회 안팎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의 전환 이후 사회적인 것의 소멸 혹은 탈사회화의 사회 등의 주제로 발전국가나 복지국가의 형태로 집합적인 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하던 사회적인 것의 재현이 어떻게 위기를 맞이했으며 그것이 이 사회에 관한 이론을 곤경에 빠뜨렸는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논의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사회적인 것의 황혼을 거론하고 있을 때 사실 우리가 목격하고 있었던 것은 새로운 사회형태의 등장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어느 사회학자 역시 사회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개인들의 현상학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그러한 경험을 토로하고 반성하며 논쟁하는 새로운 언어적 공간의 변성은 사회학 이론을 압도하리만치 지적이며 가끔 아찔할 만한 이론적인 담론을 생산합니다. 이럴 때 사회학이란 학술적 제도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이론적 구속복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초조감을 느끼고 경험, 감정, 느낌, 상호작용, 연결망, 윤리 등으로 그러한 자발적, 직접적인 경험들-물론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개되고 조율되며 생산된 것이지만 말입니다-을 이론화해야 한다는 욕망에 이끌린다는 것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위험할 수 있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다른 말일 수 있을 경험적인 감각과 지식에 투항하는 것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감각적 경험을 초과하는 추상적이고 재현 불가능한 구조적 규정에 대한 성찰을 억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직접적 경험이 정박해 있는 시간인 현재의 시간에 간헐적으로써 역사적 비판을 좌시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게 될 때 소셜미디어의 인기 해시태그 자체가 오늘의 사회이론의 주제와 다름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사회학 이론과 방법 모든 면에서 어떤 치명상을 안기게 될 것인지 여러분 모두 예상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면 계속)

그러나 한편 구조의 효과와 규정이 어떻게 개인의 경험을 생산하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그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론 역시 서사라는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는 서사란 문학이나 허구적인 스토리텔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다수의 언어적 실천을 관통하는 하나의 경향, 즉 개인이 현실과 맺는 상상적 관계를 재현하려는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의 서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프레드릭 제임슨 같은 이는 ‘인식적 지도그리기의 미학’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시기에 비판적인 담론적 실천의 목표를 밝혀보고자 애쓴 바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총체성이란 두 겹입니다. 먼저 우리를 압도하는 자본주의적 총체성입니다. 물론 그것은 비판이론 식의 표현을 빌자면 허위적 총체성입니다. 반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측에서의 총체성이 있습니다. 인식적 지도그리기란 개인의 구체적인 현상학적인 경험과 거의 재현이 불가능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사회적 규정을 결합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시도야말로 엄밀하게 비판을 구성합니다. 주재님게 말하자면 정치경제학 비판으로서의 마르크스의 프로젝트란 것에서의 비판이 정치경제학의 오류와 사실과의 비조응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외려 마르크스는 고전정치경제학은 언제나 현실적 타당성을 갖는 지식임을 기꺼이 인정하고 상찬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비판임을 상기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회학적 과학이 아니라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개념을 선호했던 위대한 사회학자 라이트 밀즈의 통찰력 역시 추상적인 사회형태로서의 자본주의와 원자화된 개인들의 경험의 세계로의 자본주의의 이율배반을 직시하며 사회학의 이론적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80-90년대에 사회학 연구자가 누린 행운이 있었다면, 계급, 민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개인들의 경험의 세계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었을 것입니다. 박노해의 시를 읽거나 백무산의 소설을 읽으면,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집합적 삶의 세계로서 계급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구로공단이나 주안공단을 지나칠 때면, 우리는 계급이나 노동, 산업같은 사회과학의 개념이 개인적 삶의 알레고리이며 각 개인의 삶에 물질화, 육화되어 있음을 단박에 깨달을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극히 태만한 것이 될 것이며 계급과 노동, 산업 등의 개념들은 불평등과 부정의에 저항하는 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신성한 도덕적 범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대 사이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분할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학회장의 취임인사로서는 이례적일 수 있을 장광설을 늘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게 부과되었다고 제가 느끼는 비판사회학회 내부의 불화를 중재할 고도의 외교적인 책무는, 실은 비판사회학 자체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을 오인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위기를 해결함으로써만 비판사회학회가 당대적인 비판의 요람으로써 지난 시대의 위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저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임학회장으로서는 저는 이러한 위기를 수습할 책임을 통감하며 새로운 임원진들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저와 새로운 임원진들의 노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비판사회학회 회원 여러분들 모두의 개입과 논쟁, 비판사회학회를 자랑스럽게 했던 그 열정을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춘계학술대회

코로나로 멈췄던 춘계학술대회를 다시 엽니다!

2023년 비판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역과 한국사회(가제)'라는 주제로 4월 29일(토)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넓은 의미의 지역 관련 주제는 물론이고 대주제와 관계없이 자유 주제로 발표를 원하시는 회원 및 연구자께서는 3월 26일(일)까지 발표 신청([신청서양식링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적으로 공동발표 세션을 구성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발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및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기대합니다.

- ☐ 일시 : 4월 29일 토요일
- ☐ 장소 : 부산대학교
- ☐ 주최 : 비판사회학회
- ☐ 주관 : 비판사회학회,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 ☐ 후원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 ☐ 대주제 : 지역과 한국사회 (가제)
- * 유관 주제 및 자유 주제 발표, 세션 신청 가능

〈향후 일정〉

- ☐ 발표 신청 마감 : 3월 26일(일)
- ☐ 발표문 제출 마감 : 4월 14일(금)
- ☐ 발표 신청 및 기타 문의:
sansahak1984@gmail.com
02-3148-6220

제27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취미에서 일자리로:

청년 노동자의 온라인 노동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 형성과정 고찰

일시: 3월 24일(금) 오후 4:00~6:00

사회 임운택(계명대)

발표 노성철(일본 사이타마대) · 류연미(서울대)

토론 박수민(연세대), 하대청(광주과기원)

진행 온라인 중계 ZOOM 674 287 2245 (PW: 2023)

문의 sansahak1984@gmail.com

* 현장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 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비평 비판사회학회



회원 신규박사논문 소개

현대 과학의 인과성의 구조변동 인과성의 분기, 위상전이, 그리고 불완전한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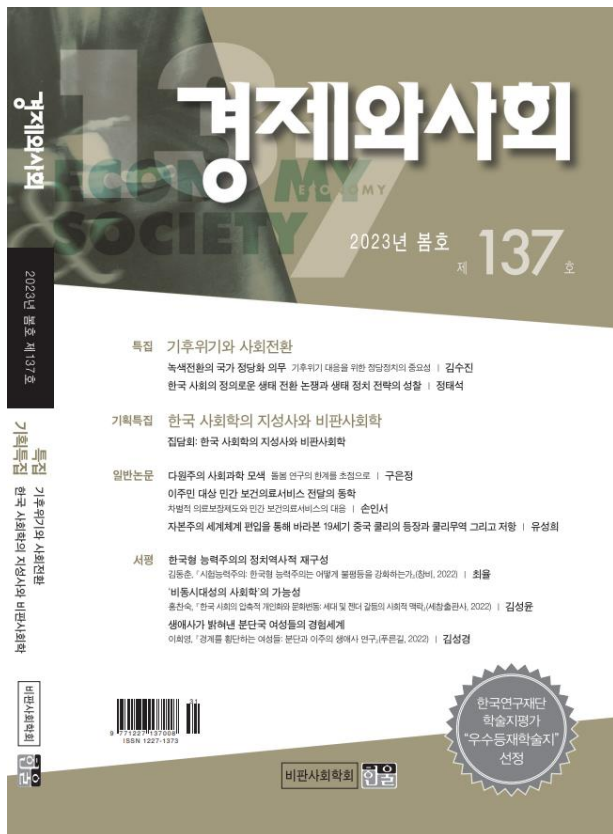
■ 노승미

(중앙대 사회학과, 2023년 2월)

사회과학은 사회적 현상을 기술하는데 몇 가지 합리적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방법을 적용하는 데서 나오는 일반화를 흔히 ‘과학적’이라고 말한다면, 사회과학이 과학을 통해 논하고자 하는 전문적 분석의 장애는 막상 과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략되어 있다. 사회과학이 근대의 자연과학으로부터 자신을 발견했다면, 현대의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과학은 여전히 그런 자연과학인가? 과학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의 과학에 온전히 합의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과학은 언제나 불변하는 하나의 과학인가? 많은 사회학자들은 보통 과학 지식의 내용과 성격 자체를 탐구하기보다, 지식장을 둘러싼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작동 혹은 지식인의 특수성을 분석하곤 한다. 그런 문제의식은 주로 과학을 둘러싼 권력과 권위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논의하지만 사실상 과학 지식 일반 원리의 내적 층위의 균열이나 변동은 구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한다. 과학적 기획의 인위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과학의 내적 층위와 그 변동 자체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은 드물다. 현대 과학의 위기에 있어, 과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서 사회학의 분석과 지향은 무엇인가? 과학 이론 그 자체는 왜 사회학적 비판의 재료가 되지 않는가? 근대 과학은 사실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반으로서 사실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즉 인과성은 궁극적인 원리의 층위가 존재한다는 선형적 인식으로부터 모든 과학 진술의 파생에 존재하는 선법적(modal) 원리이자 세속적 확실성의 근간이 되어왔다. 과학 이론 내부의 인과성은 말하자면 공적 인식론의 기초 조건이고, 단지 어떤 부류의 관념이나 담론의 종류로 분석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본 연구는 과학 지식이 생산되는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과학 이론 그 자체가 인간 집단에게 만들어내는 인식론의 근본 조건을 분석하고자 인과성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현대적 의미의 인과성은 뉴턴적 체계를 통해 구축되었으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 체계에 대한 분기와 위상전이가 발생한다. 과학의 내부에서 사실, 법칙, 원리의 절합 양식이 변동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점이 변동하면 인과성 원리가 변동한다. 인과성은 과학의 이론과 원리 내부에서 견고한 핵을 이루되 시대적으로 변동하는 역사적 체계다. 따라서 인과성은 각 시대의 지배적 과학 원리의 변동과 함께 상이한 형태의 질서 양식으로서 드러나면서도, 각 시대의 보편적 합리성의 근간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주요 과학 분과(주로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의 내적 변동을 사례로 하여, 과학 지식이 생산되는 데에 근간을 이루는 인과성의 지적 이행을 분석한다. 19세기 다양한 과학 분야에 도입되는 확률 방법의 일반화와 다윈의 등장은 고전적 인과성에 새로운 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19세기까지의 결정론적 인과성이 확률을 통해 실재의 요동과 불확실성을 길들이고자 했다면, 인과성의 근본적 구성 원리와 조건이 변동하면서 근본적 불확실성의 기반에서만 결정론적 인과성을 제한된 특수 사례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이 20세기 인과성의 위상전이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이런 지적 이행, 혹은 인과성의 구조적 변동은 새롭게 출현한 뉴턴적 실증주의자들의 학문적 경향으로 불완전하게 통합된다. 20세기의 주류가 된 과학주의는 점차 인식론은 없는 계산 가능성 중심의 실증주의를 고수하지만, 그러한 과학이 생산하는 기계적 상관관계들은 되려 현대 과학의 안팎에서 지적 불안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도래하는 현대 과학의 위기를 인과성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끝)

〈경제와사회〉 137호(3월 발간) 목차



■ 특집: 기후위기와 사회전환

녹색전환의 국가 정당화 의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당 정치의 중요성

김수진

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생태 전환 논쟁과 생태 정치 전략의 성찰

정태석

■ 기획특집: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와 비판사회학

집담회: 한국사회학의 지성사와 비판사회학

■ 일반논문

다원주의 사회과학 모색: 돌봄 연구의 한계를 초점으로

구은정

이주민 대상 민간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의 동학: 차별적 의료보장제도와 민간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응

손인서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을 통해 바라본 19세기 중국 쿨리의 등장과 쿨리무역 그리고 저항

유성희

■ 서평

한국형 능력주의의 정치역사적 재구성

김동춘, 『시험능력주의: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장비, 2022)

최을

‘비동시대성의 사회학’의 가능성

홍찬숙, 『한국 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 세대 및 젠더 갈등의 사회적 맥락』(세창출판사, 2022)

김성윤

생애사가 밝혀낸 분단국 여성들의 경험세계

이희영, 『경계를 횡단하는 여성들: 분단과 이주의 생애사 연구』(푸른길, 2022)

김성경

〈경제와 사회〉 링크

『경제와사회』 137호(2023년 봄호)는 학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널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아노미 또는 기후소외?

■ 주은우 (편집위원장/중앙대)

이른바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1972)가 출간된 지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 그런데 이 로마클럽이란 건 도대체 정체가 뭔지, 지극히 중요한 내용을 담은 건 사실이지만 이 클럽의 보고서가 도대체 무슨 자격과 권위로써 세계 정치·경제·문화에 그토록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일반인으로선 당최 알 수가 없다. 이후로도 한 번씩 모종의 엘리트 집단이 뭉쳐 등장해 세계의 미래 등등과 관련된 비전 등등을 내놓곤 한 것 같다. 지구화 시대에 들어 언젠가부터는 다보스포럼이란 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 좋은 고급휴양지에서 열리는 이 정례 행사에 기업가, 정치인, 관료, 학자들이 모이면 각국 언론의 취재 경쟁이 벌어지고 보통사람들은 세계 경제의 운영과 사회 발전의 방향에 대한 점잖지만 신성한 지침을 받아 든다. 옛날과 다른 건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 참가자가 많고, 포럼 자체가 세인들의 관심을 즐기고 조장한다는 점 같은 것일 거다. 이런 모임은 G7이니 G20이니 하는, 어쨌거나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회담과 같은 것일 수 없다. 모스카(Gaetano Mosca)나 파레토(Vilfredo Pareto)의 책을 다시 꺼내 들고 지구적 수준에 적용해야 할 판이다.

아무튼 『성장의 한계』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삶을 사유하는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같은 개념들이 개발되어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구 생태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은 지금까지도 별로 인상적인 게 이루어진 바 없다. 오히려 이제는 산이 깎여 나가고 강이 오염되는 차원을 넘어 지구상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대한 기후변화에 모두가 내몰릴 뿐이다. 작년 여름에도 세계 곳곳은 폭염에 시달리고 열 돔에 갇혔음은 물론이고, 오랜 가뭄으로 물이 말라버린 강과 호수 바닥에서 고대인들의 유적과 더불어 “나를 보면 울어라”라는, 바위에 새긴 고대의 경고문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의 사막 지대 데스밸리에선 10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지고 파키스탄은 집중호우로 인한 기록적 홍수로 아예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기고 지형이 바뀌어 버렸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이런 기상이변이나 재난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세이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1997년 선진국들 사이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2015년엔 모든 국가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발효(2005)되기 전에 주요국들이 탈퇴해 버린 교토의정서의 운명,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다시 복귀한 소동(2020년 말~2021년 초)이 잘 보여주듯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처한 지구적 움직임은 효과적이기는 커녕 위태롭기만 하다. 굶주림 속에 빙하가 녹아버린 바다 위를 처연하게 헤엄치는 북극곰이 지구온난화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것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직면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인류의 자화상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겨 사라지기 일보 직전인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대표하는 것처럼 말이다.

(다음 면 계속)

그런데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기후위기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없거나 역으로 정보와 지식의 범람 속에 진위를 구별하고 옥석을 골라낼 수 없어 무력감을 더하게 된다. 더구나 이걸 날씨나 기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평균으로 정의된다는 기후에 관한 이야기라 상황은 더 나쁘다. 한때 기후변화가 산업화 이래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인지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두고 소모적 논쟁이 과열되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 주류 과학자들은 인위적 기후변화를 부정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지 일반인으로선 때때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 인간이 지구온난화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데이터를 제시하며 인간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다거나, 기후변화가 그렇게 극적이거나 파국적인 것이 아니라거나, 어디까지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적인 기후변화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이 수 세기 또는 아예 지질학적 범위의 기온 편차 그래프를 보여주며 중세 소빙하기 이전 또는 선사시대의 빙하기 이전에는 더 따뜻했음을 강변하거나, 해수면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에 맞서 특정 지역이지만 일정 기간 사이에 해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음이 기록된 그래프를 들이대면 막 헛갈리게 된다. 그러면서 파리협정의 목표처럼 기온 상승을 2°C 또는 1.5°C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이나 207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 ‘그래, 현실이 그렇긴 하지’ 고개를 끄덕이기 쉽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전통적인 용어를 쓰자면 대중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담론과 관련해 일종의 아노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 담론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규범적·도덕적 담론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도 더 그렇다.

기후재앙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 앞에 일반인들이 무력감만 느끼기 쉬운 또 다른 이유는 그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무계감과 묵시록적 파국의 전망에 압도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의 시스템에선 대부분의 인간은 소비하고 즐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도 매 순간 탄소발자국을 남기고 자신이 직접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기에 “이미 늦었다”거나 “기후재앙까지 몇 년” 같은 말들과 태풍과 홍수 같은 기상이변과 재난의 이미지와 마주하면 망연자실할 뿐이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이 기후 선동가들이 벌이는 인류 역사 최대의 사기극이라 비난하며 ‘기후 종말론’이라 이름 붙인 전망 앞에서, 기후변화의 실상과 예측되는 결과를 직시하길 회피하고 탄소배출이건 뭐건 신경 끄고 현재의 순간을 더 충실하게 즐기려, 예를 들어 소비와 여행에 집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합리적이기까지 하다. 어차피 인류가 한꺼번에 종말을 맞이한다면 특별히 유감스러울 것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생망’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더 그럴 것이다. 인간이 없으면 오히려 지구는 몇 십억 년은 더 잘 존속할 것 같고.

하지만 기후위기가 인류와 문명의 종말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완결되는 깔끔한 것도 아니고 평등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재앙과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고 그 재앙과 고통의 분배 역시 매우 불평등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삶의 전성기를 펼쳐야 할 젊은이와 어린이의 억울함과 인간 외의 그 숭한 생명체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간중심주의의 사고와 행위의 총체가 기후변화를 초래했다면, 그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고의 지평은 탈인간화한다 하더라도 행위와 실천은 인간을 중심에 놓은 시스템 전환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만큼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치들 역시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의 절박함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다고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에 오물을 뿌리고 길바닥에 점착제로 손을 붙여 교통을 막는 행위는 문화 반달리즘적 테러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 행위로만

(다음 면 계속)

비치고, 오히려 또 다른 엘리트주의로서 기후위기 담론에 거부감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쉬울 것이다. 그럴수록 일반인들은 기후변화의 현실과 기후위기 담론과 마주해 소외되는 느낌에 빠지지나 않을까. 너무나 더딘 기후조건 개선의 노력과 무관심해 보이기만 하는 대중 앞에 절망한 나머지 생태 전환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있다고 들린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자들일 것이다. 무엇보다 그 지적·도덕적 오만함에 말문이 막힌다.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노력은 끈질긴 헤게모니 투쟁을 동반함이 명약관화한데, 헤게모니는 대중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지적·도덕적인 지도력이고, 결국엔 지성과 이성, 그리고 인류 문명이 커다란 희생을 치르며 합의를 이루어온 포편적인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 어쨌거나 현재의 지구에선 그래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에 따라 이번 호 특집 ‘기후위기와 사회전환’은 지난 겨울호 특집에 이어 생태 친화적인 사회전환의 전략과 가능성 또는 어려움을 살펴본다. 김수진의 「녹색전환의 국가 정당화 의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당정치의 중요성」은 정당정치의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 쟁점들이 선거에서 실종되거나 주변화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정태석의 「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생태 전환 논쟁과 생태 정치 전략의 성찰」은 이념적·규범적 논의와 주장에 머물지 않고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의 다양한 주체들을 아우르는 현실적인 전환 전략을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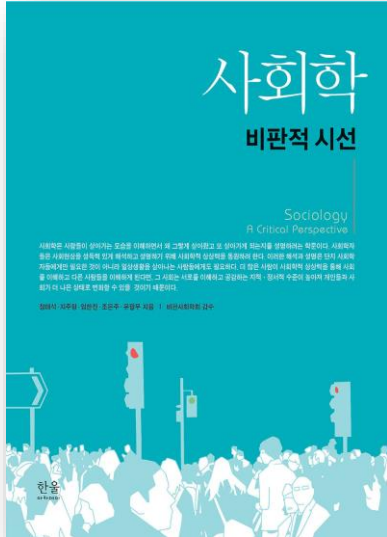
이번 호에는 기획특집을 실었다.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와 비판사회학’은 《경제와사회》 편집위원회가 지난해(2022년)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라는 4권의 저작을 출간하여 해방 이후 한국 사회학의 역사를 정리한 정수복 선생을 초청해 한국 사회학사의 맥락에서 비판사회학의 역사와 과제 및 전망에 대해 반성적 토론을 벌인 집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비판사회학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분들의 정독을 부탁드린다.

일반논문은 세 편이 게재되었다. 구은정의 「다원주의 사회과학 모색: 돌봄 연구의 한계를 초점으로」는 돌봄 연구를 사례로 삼아 관계의 다원적 목적에 주목하는 다원주의 사회과학을 구성하려 시도한다. 손인서의 「이주민 대상 민간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의 동향: 차별적 의료보장제도와 민간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응」은 이주민에 대한 민간 보건의료서비스의 실태와 전달 과정을 조사하고 현재의 차별적인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요청한다. 유성희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을 통해 바라본 19세기 중국 쿨리의 등장과 쿨리무역 그리고 저항」은 19세기 중국 쿨리무역의 성장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중국인들의 저항 및 쿨리들의 저항과 그 의미를 세계체계론의 관점에서 분석·검토한다.

서평 역시 세 편이 실렸다. 최윤희의 「한국형 능력주의의 정치역사적 재구성」은 김동춘의 목격한 저서 『시험능력주의: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를 검토하고 공정 담론 비판과 교육문제 분석으로서의 의미를 조명한다. 김성윤의 「비동시대성의 사회학의 가능성」은 오랫동안 개인화 문제를 연구해 온 홍찬숙의 『한국 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 세대 및 젠더 갈등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고 ‘압축성’의 문제들을 대신해 ‘동시대성’의 문제들을 제안한다. 김성경의 「생애사가 밝혀낸 분단국 여성들의 경험세계」는 독일 이주 한인 여성과 남한과 유럽을 이동하는 북한 여성을 연구한 이희영의 『경계를 횡단하는 여성들: 분단과 이주의 생애사 연구』가 담고 있는 다차원적 의미를 정리해낸다.

(끝)

회원신간소개



사회학: 비판적 시선

한울아카데미, 2023년 3월, 768쪽

정태석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엄한진 (한림대 사회학과) 조은주 (전북대 사회학과)
유팔무 (한림대 사회학과) 비판사회학회(감수)

이 책은 꾸준히 사랑받아 온 사회학 입문서로서 2004년 출간된 『사회학』, 2012년 개정판인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를 잇는 신판이다. 새로이 출간된 『사회학: 비판적 시선』은 구판에 비해 구성을 약간 바꾸면서 내용을 명료화했고, 최근 사회변동의 이해를 돕는 새로운 내용들을 담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사회학의 기본 개념과 문제의식을 숙지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영위하는 일상생활과 문화에 대해, 현대 사회의 핵심 체제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와 사회운동에 대해,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학의 최신 쟁점들에 대해 더욱 더 폭넓은 이해를 갖추게 될 것이다.

[목차링크](#)



지금 시작하는 평등한 교실 가르치며배우는페미니스트페다고지

동녘, 2022년 12월, 212쪽

오혜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과젠더 연구소) 외

가장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교실, 평등한 교육을 꿈꾸는 선생님들이 일구어낸 실천의 기록
교실이라는 세계가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곳하기를 바라는 선생님들이 모였다. 초등학생 영어 교실, 청소년 음악 교실, 대학생 젠더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가장 작은 목소리까지 듣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이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들을 만나 평등한 교육을 위한 돌파구를 찾았다. 그 돌파구란 바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이들이 말하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이전보다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하려는 페미니스트 교육자들의 연구와 실천의 집합체이다. 이 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꿈꾸는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며, 각자가 몸담은 ‘교실’이라는 세계를 조금씩 바꿔간 기록이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경남 근현대사: 사건, 공간, 운동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2023년 3월, 506쪽

김명희 이향아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외

이 책은 기존의 한국근현대사와 관련한 역사 서술이 지역의 현대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경상국립대 사회과학연구원이 기획한 ‘경남 근현대사: 사건, 공간, 운동’은 지방차별을 당연시해 온 관성적 인식에 도전하면서, 지방사나 국가사의 일부로서가 아닌 지역의 관점에서 경남지역 근현대사 다시 쓰기를 시도한다. 이 책은 1부 ‘사건으로 본 경남지역 근현대사’와 2부 ‘경남의 사회운동과 지역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시기에서의 주요 사건을 통해 경남지역 현대사와 시공간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진주지역에서의 3·1운동과 형평운동, 강제동원 및 재난 등의 이유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이주했다가 원폭 피해자가 되어 귀국한 합천 주민들의 트라우마, 경남에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와 운동의 역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산청·함양·거창사건, 경남의 산업경관과 국토개발에 대해 다룬다. 2부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경남지역에서 전개된 사회운동의 역사를 기록한다. 농민운동,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교육운동, 주민운동 등 한국사회 및 민주주의를 일구는 데 기여한 경남 사회운동의 역사를 여러 주체 및 부문 운동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목차링크

회원동정

- 강민형 회원: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임용 (3월 1일자)
- 신재열 회원: 일본 히로시마 대학 인간사회과학연구과 부교수로 이직 (4월 1일자, 예정)

신입회원

- 정회원 정수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준회원 이강식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회원현황

(3월 16일 현재)

- 총회원 294명 (정회원 248명 / 특별회원 14명 / 준회원 19명 / 기관회원 3개)

(※ 마지막 회비 납부일자가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중지되고, 회원현황에서 제외됩니다.)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연 24만원 (월2만원)

(2) 연12만원 (월1만원)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가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경제와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특집
주제 제안 및 특집필자 추천, 서평대상
도서 추천(국내필자도서에 한정), 그리
고 '논평과 토론' 코너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회원들께서는 편집위원회
(crisocio@gmail.com)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 2023년 1월 5일 전임-신임 집행부간 인수인계
- 2023년 1월 5일 2023년 사업방향 논의와 운영위원회 소집을 위한 예비 회의
(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 2023년 2월 13일 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 2023년 2월 15일 1차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 2023년 3월 16일 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2023년 임원진

- | | | |
|---|---|--|
| <p>■ 운영위원회</p> <p>회장 서동진(계원예술대)</p> <p>운영위원장 김명수(전남대)</p> <p>운영위원 김성운(문화사회연구소)</p> <p>운영위원 박상희(서울시립대)</p> <p>운영위원 서선영(충북대)</p> <p>운영위원 이도훈(연세대)</p> <p>운영위원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p> <p>운영위원 정수남(전남대)</p> <p>운영위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p> | <p>부회장 최현(제주대)</p> <p>연구위원장 김주환(동아대)</p> <p>운영위원 김재형(방송대)</p> <p>운영위원 박지훈(중앙대)</p> <p>운영위원 신희주(가톨릭대)</p> <p>운영위원 이정은(창원대)</p> <p>운영위원 전원근(제주대)</p> <p>운영위원 조은주(전북대)</p> | <p>부회장 최인이(충남대)</p> <p>운영위원 강민형(전북대)</p> <p>운영위원 김주호(경상국립대)</p> <p>운영위원 박치현(대구대)</p> <p>운영위원 육주원(경북대)</p> <p>운영위원 이태정(성공회대)</p> <p>운영위원 전의령(전북대)</p> <p>운영위원 조혁진(노동연구원)</p> <p>운영간사 장병호(중앙대)</p> |
| <p>■ 편집위원회</p> <p>편집위원장 주은우(중앙대)</p> <p>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p> <p>편집위원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p> <p>편집위원 유형근(부산대)</p> <p>편집위원 장귀연(노동권연구소)</p> <p>편집위원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p> <p>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학기술원)</p> <p>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p> <p>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p> | <p>편집부위원장 지주형(경남대)</p> <p>편집위원 김민정(성공회대)</p> <p>편집위원 김철효(경상국립대)</p> <p>편집위원 윤상우(동아대)</p> <p>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p> <p>편집위원 채오병(국민대)</p> <p>편집위원 홍덕화(충북대)</p> | <p>편집위원 구본우(창원시정연구원)</p> <p>편집위원 김여진(강원대)</p> <p>편집위원 박정미(충북대)</p> <p>편집위원 윤상철(한신대)</p> <p>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p> <p>편집위원 최현(제주대)</p> <p>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p> <p>편집간사 강석남(중앙대)</p> |